



WP 20-10

# 균형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와 과제

안흥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kahn@krihs.re.kr)



※ 이 Working Paper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저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연구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저자의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고, 인용 시에는 저자 및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차 례

01 서론	05
02 저성장·고령화 동향과 지역균형발전	09
03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일자리 창출	13
04 기존 지역일자리 창출방식의 한계와 전환 필요성	21
05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와 과제	27
06 향후 정책과제	37



# 01 서론

## 1) 연구배경

- 저성장·고령화시대에 지방중소도시 및 비도시지역은 경쟁력의 저하로 지속적 쇠퇴 가능성
  - 저성장·고령화시대 지방중소도시 및 비도시지역은 고령화율이 대도시에 비하여 2배 이상인 지역이 대부분이고, 교육 및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의 젊은 층의 인구이동이 지속되면서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물론 인구소멸을 걱정할 정도임
  - 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져 젊은 층의 유출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고령화 및 지역경제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지방중소도시·비도시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모든 지역의 경쟁력을 동일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목표가 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음
  - 특히 지속적인 젊은 층의 유출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방중소도시 및 비도시지역이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광역 대도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움
  - 따라서 저성장·고령화사회에서의 지역균형발전 목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축소보다는 지방중소도시 및 비도시지역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함
-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대상은 공간과 함께 사람도 포함되어야 함
  - 지역균형발전은 1인당 GRDP와 같이 지역 간 평균소득수준을 균등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 내 주민의 소득분배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의미를 가짐
  - 즉, 지역의 평균소득수준이 높더라도 극단적으로 불균등한 소득분포를 가진 지역을 발전 지역이라고 볼 수 없고, 균형발전의 목표도 될 수 없음

## ■ 그런데 저성장·고령화시대의 지방중소도시·비도시지역의 활력은 경쟁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대안 모색이 필요

- 지방중소도시 및 비도시지역의 활성화는 젊은 층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고령인구도 함께 하는 활력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지역이나 지역주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발전전략이 아니라 협력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

## 2) 연구목적 및 범위

###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성장·고령화시대에 저출산·고령화와 젊은 층의 유출 등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높고, 인구 감소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잃고 쇠퇴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와 비도시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음
- 특히 성장요인과 잠재력이 부족하여 낙후지역을 벗어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젊은 층의 유출을 막고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전략은 저성장·고령화 사회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새로운 대안의 하나로 1990년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인구감소와 소득 양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두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일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함
- 다만 본 보고서의 특성상 연구기간 및 예산 등의 제약으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지방중소도시와 비도시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안은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자 함

### ■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우선 2장에서 우리나라 및 광역시도의 저성장 및 고령화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저성장 및 고령화가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분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제시하였음

- 3장에서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지역에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위한 실천적인 수단이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와 함께 지역 소득분배의 향상은 사회통합 및 지속적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노인빈곤의 실태와 노인일자리 문제를 검토하였음
- 4장에서는 기존의 지역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관련 지역수요 조사결과 사회적경제 수요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5장에서는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의 대두 배경과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현황 및 활성화 필요성을 소개하고, 지역일자리 측면에서의 사회적경제의 과제를 다루었으며, 6장에서는 향후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02 저성장·고령화 동향과 지역균형발전

### 1) 저성장·고령화 동향

-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1990년대 후반 이래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최근 2%대로 낮아졌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OECD 전망<sup>1)</sup>에 의하면 2033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OECD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 국가전체의 저성장 기조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역에서 GRDP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지역 간의 상대적인 성장률 격차는 확대되고 있음

**표 1** GRDP 성장률 추이 (2010년 가격 기준)

구 분	GRDP 연평균 성장률(%)				
	1990~1995년	1995~2000년	2000~2005년	2005~2010년	2010~2015년
전 국	8.4	5.3	4.6	4.0	2.9
서울특별시	7.7	4.0	3.2	2.8	2.3
부산광역시	5.5	2.8	3.6	2.2	2.6
대구광역시	4.9	3.1	2.8	2.3	3.3
인천광역시	9.6	1.7	5.3	4.2	2.2
광주광역시	8.5	3.3	4.4	3.6	2.6
대전광역시	6.7	4.4	3.6	3.0	2.2
울산광역시*	-	8.3	4.2	1.5	2.4
경기도	10.3	6.8	6.9	5.9	4.0
강원도	4.7	2.4	2.2	3.4	3.0
충청북도	10.1	4.7	3.5	5.1	5.0
충청남도	9.6	8.9	8.3	6.5	5.2
전라북도	9.1	3.7	2.5	3.5	1.8
전라남도	8.7	3.5	3.1	3.3	1.9
경상북도	6.7	8.3	5.6	3.7	2.0
경상남도**	11.1	-3.6	5.5	5.1	1.4
제주특별자치도	8.9	3.0	4.1	3.2	5.2
변이계수(CV)	0.248	0.743	0.385	0.367	0.419

주: \*울산광역시는 1997년 경남에서 분리되어 1998~2000년 기간 중 성장률임.

\*\*경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95년 통계에는 울산광역시가 포함되어 있으나 2000년 통계에는 제외되었기 때문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GRDP(2010년 기준) 자료([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wc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wc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20년 4월 16일 검색)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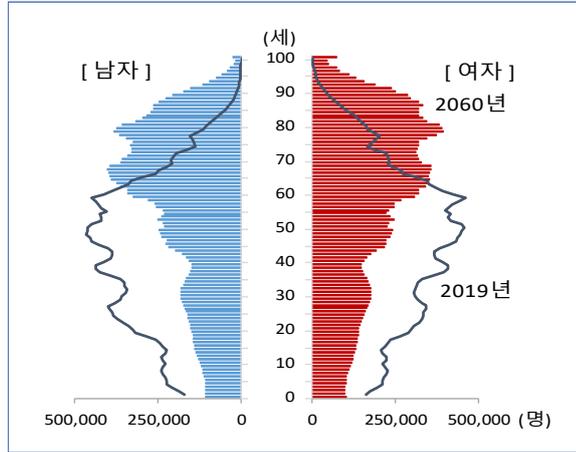
1) OECD Data indicator-Real GDP long-term forecast 자료(<https://data.oecd.org/gdp/real-gdp-long-term-forecast.htm>, 2020년 6월 1일 검색)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평균성장률의 지역 간 편차를 나타내는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nce: CV)는 1990년대 초반 0.232에서 2010년대 초반 0.394로 크게 확대되었음

■ 저출산 현상과 함께 고령화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60년에는 43.9%에 이를 전망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통계청 2020b, 1)
- 2018년 현재 14.4%인 고령화율은 2040년 33.9%, 2060년 43.9%에 이르러 총인구의 거의 절반이(약 1,882만 명) 고령자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인구피라미드



자료: 통계청 2019a, 21.

■ 고령인구의 지역 간 편중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전망이며, 이는 지역 간 인구이동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 고령인구의 변이계수(CV)는 2019년 0.94에서 2035년 1.03, 2045년 1.0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 간 편중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전망
  - 이는 인구변화의 자연적 변화 요인인 출생과 사망률의 지역 간 편차보다는 지역 간 인구이동 요인이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지역 간 인구이동 중에서 특히 젊은 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결과에 의해 고령인구비율의 격차가 발생하게 됨

표 2 지역별 고령인구의 편중 전망

구분	2019년	2025년	2035년	2045년
평균(천 명)	452	618.3	896.3	1,078.1
표준편차	423	606.6	922.3	1,143.4
변이계수(CV)	0.937	0.981	1.029	1.061

자료: 통계청 2019a, 21의 17개 시도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 저성장·고령화는 지역균형발전에 부정적 영향

### ■ 저성장시대 지역성장의 특성과 영향<sup>2)</sup>

- 고도성장기에 성장지역이었던 부산, 울산, 광양 등 임해지역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전자 산업, 바이오, 의료 등의 산업비중이 높은 충청권 등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고성장지역이 변화하고 있음
- 특히 수도권의 외연적 확대와 함께 도시지역(특히 광역시도)과 비도시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저성장시대의 성장산업 입지격차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한 혁신산업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상대적으로 (대)도시지역과 소도시 및 농촌지역 간의 성장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음

### ■ 고령화가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낮지만 지역 간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고령화 정도의 지역 간 편차는 매우 크고, 특히 비도시지역일수록, 그리고 농촌 지역일수록 고령화 수준이 높음
- 통계청(2019) 장래인구전망<sup>3)</sup>에 의하면 2047년 전라남도의 고령인구 비중은 46.8%에 이르고 40%를 상회하는 지역도 17개 시도 중 8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는 지역경제성장의 한계로 작용할 것이고, 이와 함께 복지 및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각종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 ■ 지방소도시 및 비도시지역일수록 고령화 수준이 높고, 지속적인 젊은 층의 도시로의 이동으로 지역은 점차 공동화되어 갈 것임

- 비도시지역에서는 이미 경제발전 초기부터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많았으며, 이는 고도성장기는 물론 저성장기에도 고용의 기회가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많고 더욱이 임금의 일자리일수록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젊은 층의 도시로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비도시지역의 고령인구 비중은 보다 높아지게 됨

2) 안흥기 외(2017)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정리한 것임. 위의 논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증분석 결과 및 내용은 안흥기 외(2017) 참조.

3) 통계청(2019)에 의한 전망으로 특히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고령인구가 급증하여 2017년 대비 2047년 고령인구는 165.9%(1,17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통계청 2019b, 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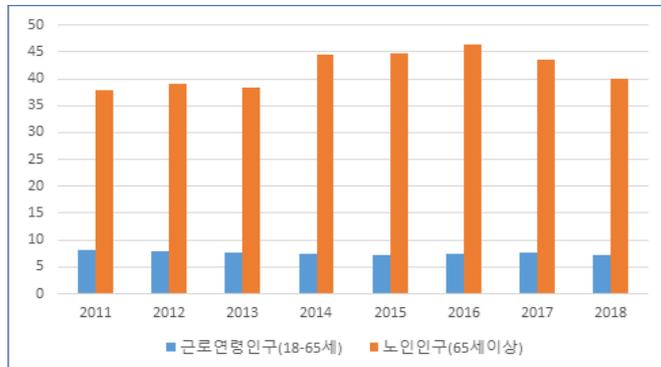
- 최근 귀농·귀촌의 영향으로 인구감소가 둔화된 비도시지역도 있고, 특히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 도래로 이러한 추세가 본격화될 수도 있지만, 고령 은퇴인구의 유입은 복지재정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임

### 3)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은 소득분배에도 부정적 영향

■ 통계청 소득분배지표는 지역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sup>4)</sup> 연령별로 구분하면 근로연령인구에 비해 노인인구 소득분배의 불균등 수준이 훨씬 심각함

- 근로연령(18~65세)의 경우 소득상위 20% 대비 하위 20% 계층 간의 소득 배율이 2011년 8.5배에서 2018년 7.5배 수준으로 개선되었음

**그림 2** 연령별 소득 불균등(5분위 배율)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 소득분배지표(연령계층별)([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6&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6&conn_path=I3), 2020년 4월 26일 검색) 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그런데 노인인구의 경우 5분위 배율이 2011년 38.2배에서 2018년 40.4배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연령인구에 비해 5분위 배율이 매우 크며, 지니계수의 경우에도 노인인구의 소득불균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 수준도 높아지고,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소득분배도 더욱 악화될 전망

- 노인인구(65세 인구)의 소득분배 불균형이 심하다는 사실에서 볼 때 향후 우리나라는 고령화 수준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소득분배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그리고 지역별 고령화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 간 소득불균등 수준의 지역 간 편차도 크며, 고령화율의 증가에 따라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될 수 있음

4) 통계청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에 의한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를 제공하였고, 2017년에 연간 소득분배지표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표는 2011년 이후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통계청 2020a, 3).

## 03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 1)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균형발전 목표와 균형발전 지표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은 ‘균형’의 개념, ‘균형의 대상 혹은 공간범위’, ‘균형의 정도’, ‘균형의 목표’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개념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혹은 국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대와 지역에 적용되는 불변의 개념을 정의하기는 더욱 어려움
  - 따라서 이 글에서는 명확한 개념의 정의보다는 저성장·고령화 사회에서의 지역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목표를 ‘지역에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주제를 다루기로 함
- 지역균형발전 정책목표의 핵심은 ‘지역에 사람이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이라고 판단됨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의 정도 차이는 있어도 모든 지역에서 진행되는 현상이며, 지역 간 정도의 차이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의 지역 간 격차는 지역 간 인구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요인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역정책의 핵심은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고, 지역에 인구가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임
- ‘지역에 사람이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
  -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수도권에 새로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임

- 새로운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에 집중되고 이는 다시 해당지역을 상대적으로 더 성장시킴으로써 일자리의 집중은 확대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중심은 지역에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과제임

■ 저출산·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지방소멸은 아니더라도 지역인구의 과소화를 초래하여 지역의 공동화를 촉진시킴

- 이상호(2018)의 분석에 의하면 2018년 소멸위험<sup>5)</sup> 읍면동 수가 1,503개로 전체의 43.4%인 것으로 분석하였고, 2013년에 비해 7.9%p 증가하였음
- 이러한 비중은 농촌지역일수록 소멸위험지역 비중이 높는데 비수도권 읍면동지역인 비수도권 도지역의 경우 소멸위험지역 비중이 70.1%에 이르고 있음

**표 3** 광역권역별 소멸위험 읍면동 수 및 비중

구분	소멸위험 읍면동						전체 읍면동
	2013(A)		2013(B)		증감(B - A)		
	개수	%	개수	%	개수	%p	
비수도권	1,137	48.4	1,360	57.8	223	9.5	2,351
도지역	1,094	61.9	1,239	70.1	145	8.2	1,767
광역시	43	7.4	121	20.7	78	13.4	584
수도권	92	8.3	143	12.9	51	4.6	1,112
전국	1,229	35.5	1,503	43.4	274	7.9	3,463

자료: 이상호 2018, 8.

■ 결과적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 내에 사람을 머무르게 하고, 지역의 경제력을 성장시키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장 긴요한 지역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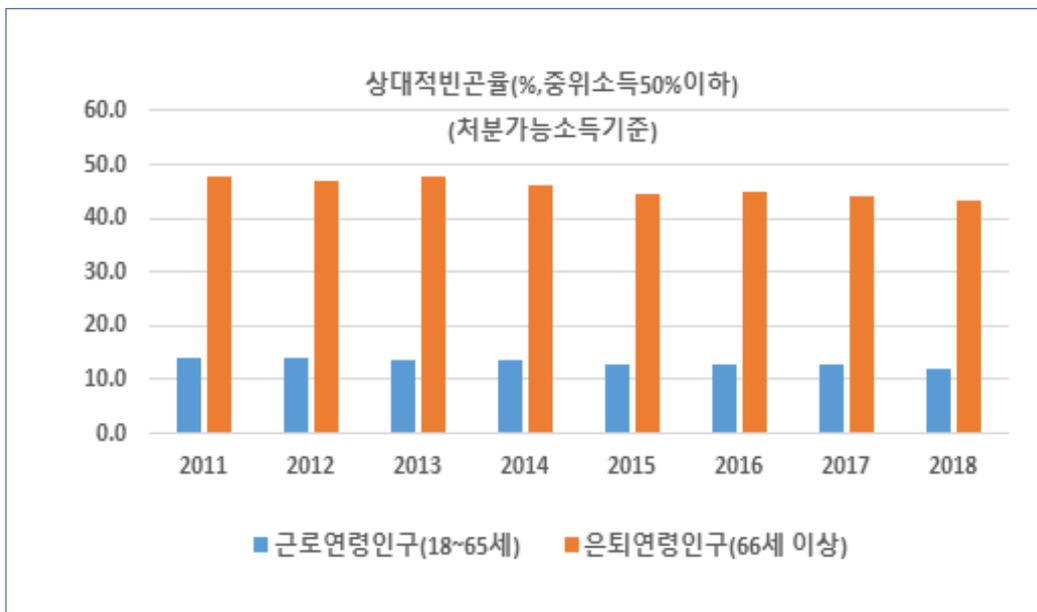
- 물론 지금까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들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정책은 없다고 할 수 있음
- 그렇지만 저성장시대 그리고 인구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혹은 적응하는 다양한 시책이 있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에 사람이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일자리의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5) 소멸위험지수=(20~39세 가임 여성인구수) / (65세 노인인구 수)로 0.5 이하인 경우 인구소멸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2) 노인빈곤의 실태와 일자리

-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2016년 현재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으며, 특히 은퇴연령인구(65세 이상)의 빈곤율은 거의 50%에 이르고 있음
  - 우리나라 빈곤율은 세후 및 소득이전 후 빈곤율(빈곤선 50%) 기준으로 17.6%로 2016년 현재 OECD 35개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음(국가통계포털. 세후 및 양도 후 빈곤율 자료 참조)<sup>6)</sup>
  - 특히 은퇴인구의 빈곤률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2018년 현재 59.9%에 이르고 이는 2011년 57.8% 이후에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조세 및 사회적 부조 등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일자리 확충을 통한 소득보전만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조세 및 사회적 부조 등으로 처분가능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현재 43.4%로 약 16%p 이상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그림 3**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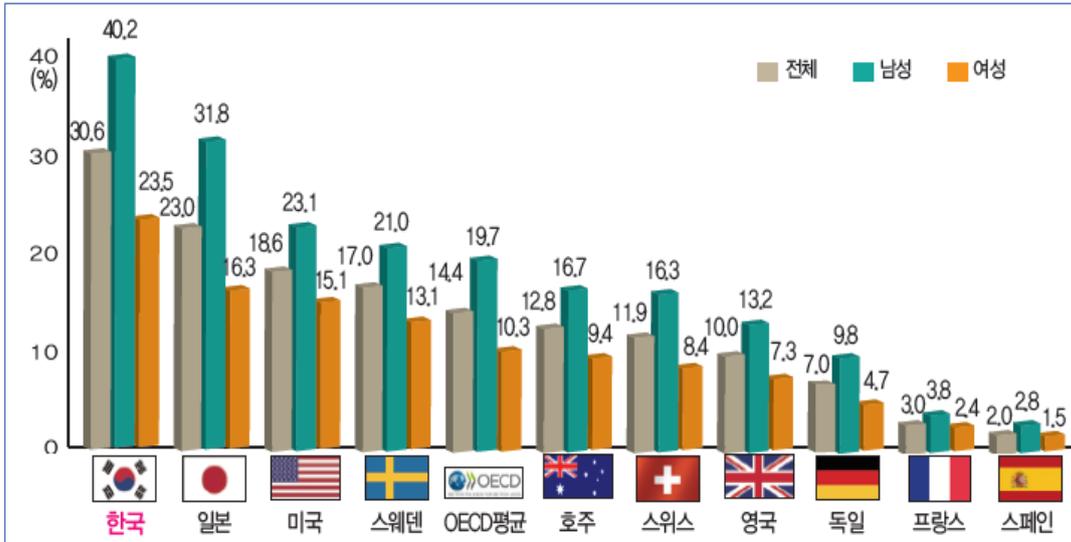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소득분배지표(연령계층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_F06&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_F06&conn_path=I3), 2020년 4월 26일 검색)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6)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BS06&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BS06&conn_path=I3) (2020년 4월 21일 검색).

■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사회적 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령인구의 고용률은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우리나라 노인인구(65세 인구)의 고용률은 2017년 현재 30.6%로 OECD 국가 평균 14.4%의 약 2배 수준으로 높고, 남녀로 구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그림 4 OECD 주요 국가의 고령층(65세 이상) 고용률 비교(2017년)



자료: 박시내 2019, 1.

■ OECD 국가와 비교해서 고령인구의 고용률과 빈곤율이 모두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고령인구의 소득분배가 형평적이지 못하고, 고령자의 임금소득이 낮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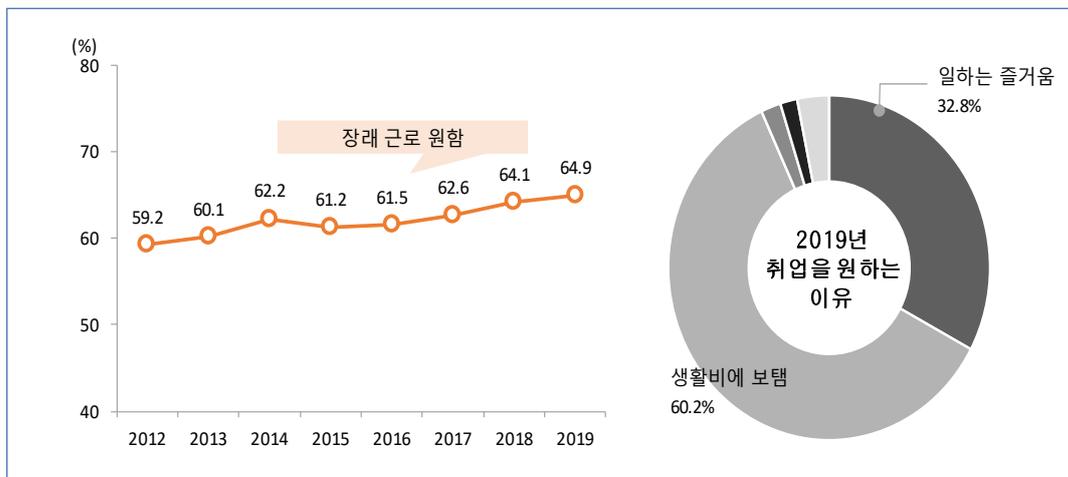
-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근로연령에 비해 약 3배에 이를 정도로 소득분배의 불균등이 심함
-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대부분 개인서비스업 및 단순노동 위주의 직종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 임금소득은 낮을 것으로 예상

■ 고령인구의 낮은 임금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래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는 계속 증가 추세임

- 통계청(2019, 고령자통계)에 의하면 2019년 55~79세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 원하는 비율은 64.9%에 이르고, 2012년 59.2%에서 5.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인구가 취업을 원하는 이유도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가 60.2%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인 이유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7) 55세~79세 산업별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6.4%)이 가장 많고, 직업별 취업자는 단순노무종사자(24.3%)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통계청 2019a, 4).

**그림 5** 고령인구의 근로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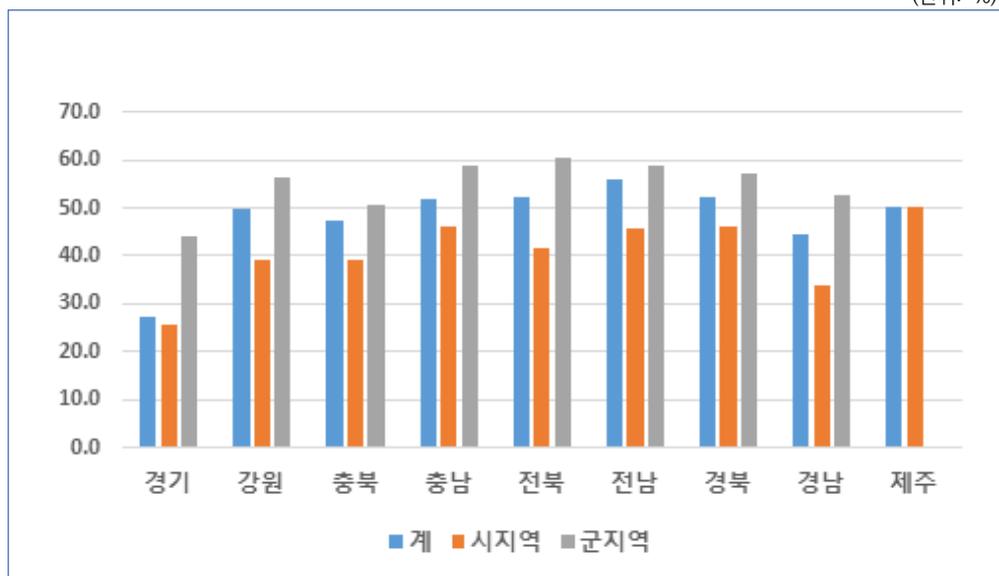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9a, 37에서 재인용.

■ 고용률(65세 인구)은 도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군지역의 경우 고령자가 대부분 농림어업부문에 종사하기 때문임

- 모든 지역에서 군지역의 고용률이 약 10~20%p 높으며, 군지역이 많은 전남의 고용률이 가장 높고, 대부분 시지역인 경기도의 고용률이 가장 낮음
- 군지역의 고용률이 높은 것은 군지역은 농림어업부문의 취업자 비중이 높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대부분 농림어업 취업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6** 시군별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2019년 2분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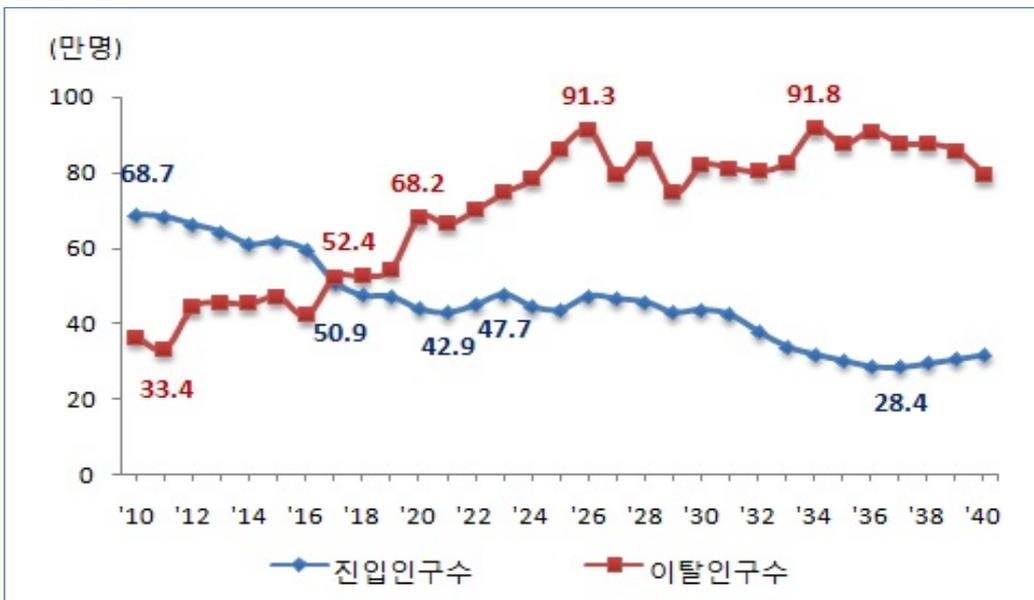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고용률([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03\\_A01S](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03_A01S) &conn\_path=13, 2020년 4월 24일 검색) 통계의 9개도 156개 시군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지역별/시군별 고용률은 시군별 자료의 단순평균임).



■ 2018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시작되었고, 2028년에는 총인구도 감소할 전망으로 제2차 에코 붐세대<sup>11)</sup>의 취업시장 진입이 마무리되는 20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인력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에 의하면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에 이른 후 감소하기 시작하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8년 현재 3,765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30년에는 3,395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
- 제2차 생산연령 이탈인구는 2018년 52.4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대 중반에 9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임
- 반면, 생산연령 진입인구는 2018년 50.9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대 중반에 40만 명대 수준으로 낮아지고 이후에도 2030년 이후 28.4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7 생산연령인구 진입·이탈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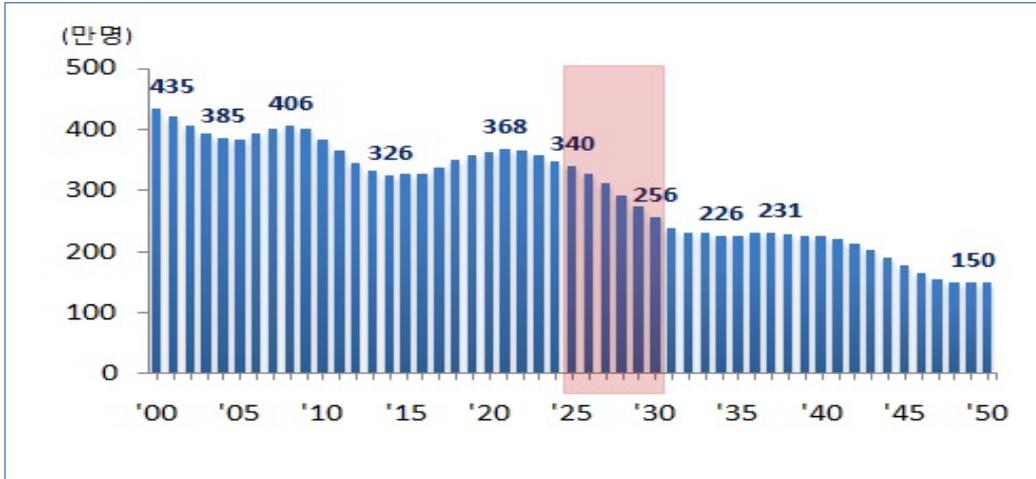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9a, 2.

- 생산연령 이탈인구와 진입인구의 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20~29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20년대 후반 이후부터 본격적인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보도와 관련하여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시기를 검토한 적은 없으며, 노동시장 여건, 고령화의 심화 등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음(기획재정부 2019b).

11) 베이붐세대(1955~1963)의 자녀세대인 1991~1996년생을 의미함.

**그림 8** 20~29세 청년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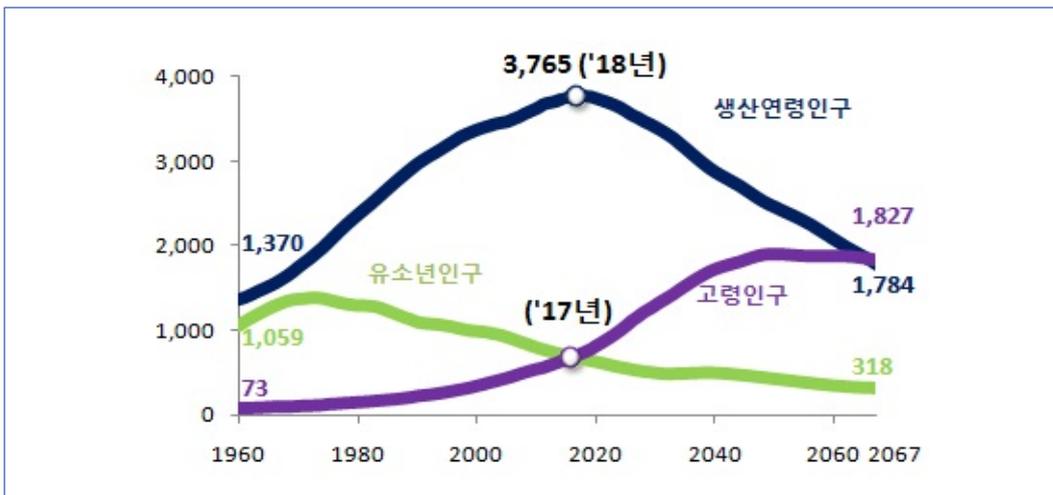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9a, 2.

■ 젊은 세대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급증은 우리 사회의 부양부담 급증은 물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므로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

- 2017년 이후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여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유소년과 노인인구의 비중)는 빠르게 증가(2017년 36.7명 → 2030년 53.0명)
- 생산연령 인구 감소로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2029년까지 0.4~0.5%p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근태, 이지선 2017, 15)

**그림 9** 연령별 인구구조



자료: 기획재정부 2019a,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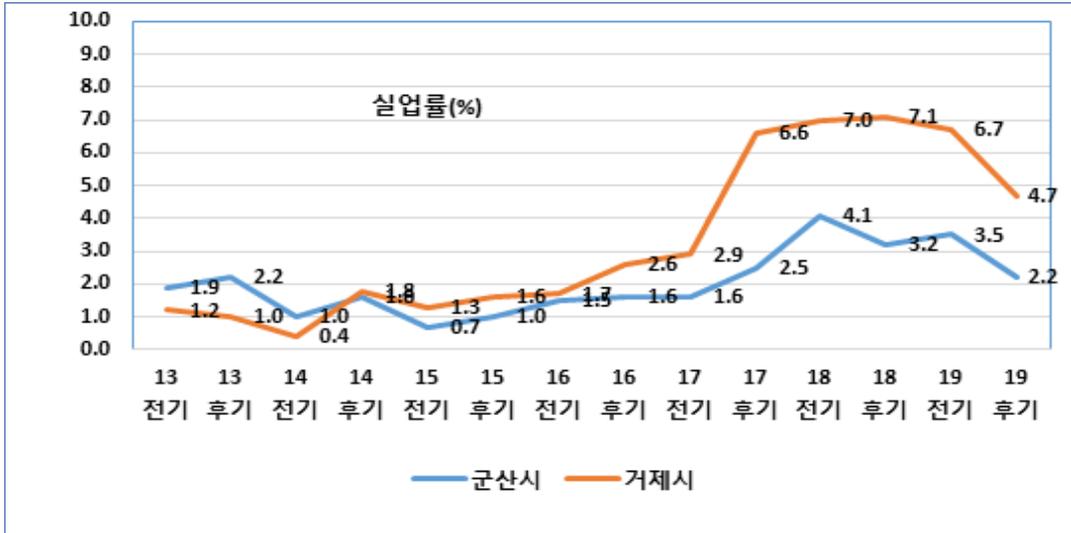
## 04 기존 지역일자리 창출방식의 한계와 전환 필요성

### 1) 대형 기업유치를 통한 외부 의존적 지역일자리 창출의 한계

- 기존 지역발전 정책에서 가장 큰 관심은 대형 기업의 지역유치에 있었으나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음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의 기본 전략은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분산배치와 지역별 특화산업, 신성장동력 산업 등의 육성에 있었음
  - 이러한 산업의 지방이전정책 및 지역의 유치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분산 실적은 미미하고, 매출액 상위 기업의 경우에도 수도권집중도에서 큰 변화를 찾기 어려움<sup>12)</sup>
- 오히려 대형 기업이 기반이 된 지역산업의 경우 경제위기 시에 단기간에 대규모의 지역일자리 상실을 초래하여 지역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음
  - 우리나라 자동차 및 조선산업의 중심지였던 울산, 거제, 군산 등은 조선산업의 위기와 글로벌 자동차회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의 쇠퇴와 대량 실직사태를 맞이한 바 있음
  - 군산의 경우에는 현대조선소의 조업중단과 GM대우 생산공장의 폐쇄 등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은 물론 2차, 3차 연관기업의 부도를 초래하였고, 이는 다시 대규모의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준 바 있음
  - 거제 및 군산지역의 경우 실업률이 1% 내외로 거의 완전 고용상태였으나 중심산업의 쇠퇴로 거제지역의 실업률은 7%, 군산의 경우 4%대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대규모의 지역 일자리 감소를 경험한 바 있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한 지역정책이 실시된 바 있지만 단기적인 대책 위주로 지역산업 구조조정, 새로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12) 안흥기 외(2017)의 한국기업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하면 매출액 500대 기업 수도권 비중이 2006년 69.4%에서 2016년 69.2%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집중도가 2006년 74%에서 2016년 78%로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었음.

**그림 10**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실업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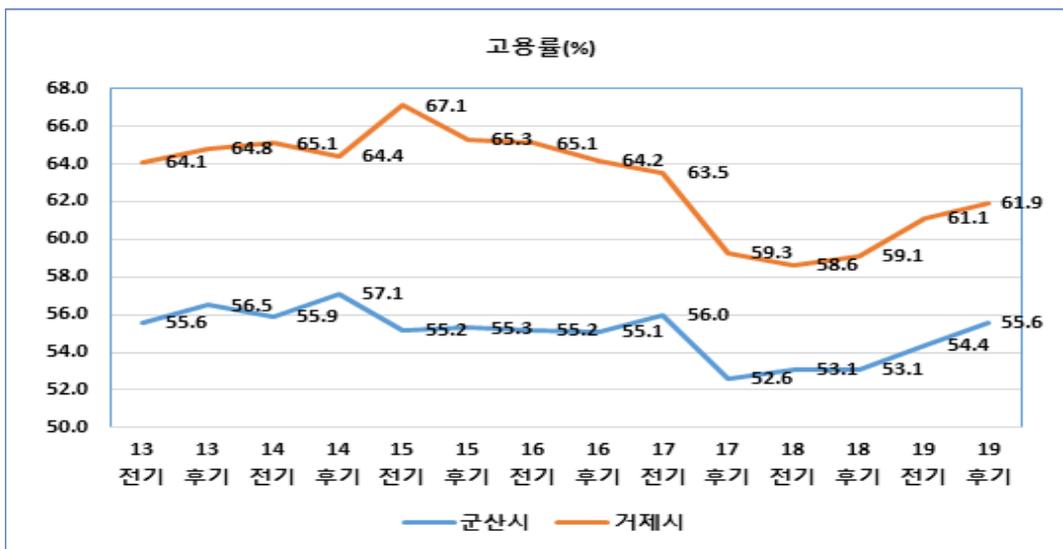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실업률([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ES3A01S&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ES3A01S&conn_path=I3), (2020년 4월 27일 검색) 통계 중 군산시 및 거제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특히 대형 기업이 지역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위기 이후의 지역경제 회복력도 낮아지게 됨

- 거제시의 경우 조선산업이 후퇴하면서 고용률이 2015년 전반기 67.1%를 기록한 후 2019년 후반기(61.9%)까지도 이전의 고용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등장하지 않는 한 경제회복 속도도 늦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2

**그림 11**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고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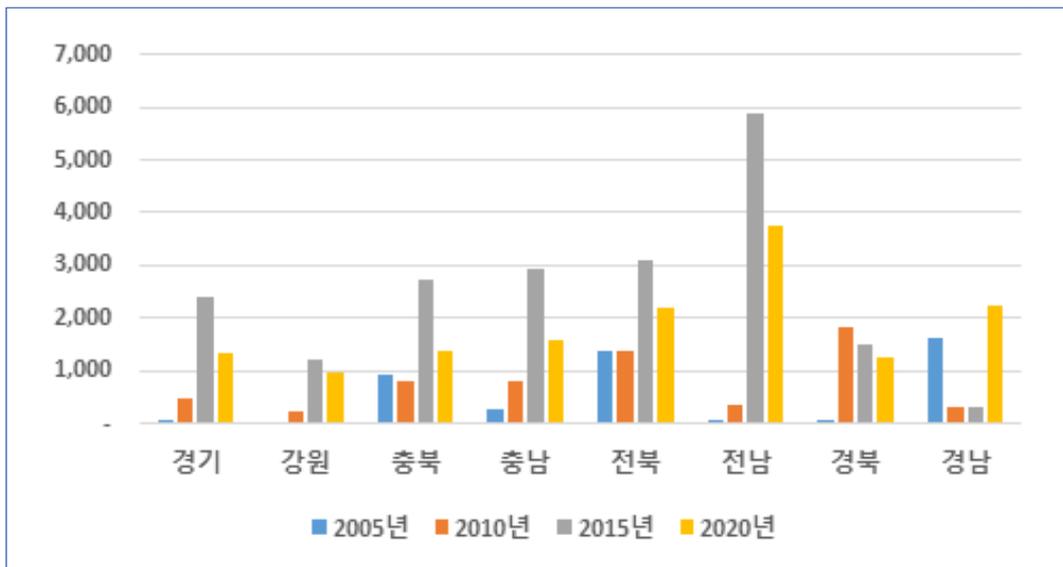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고용률([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03\\_A01S](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03_A01S) &conn\_path=I3, 2020년 4월 24일 검색) 통계 중 군산시 및 거제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한계

-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정책의 또 다른 형태로 대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는 변화가 필요함
  - 대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은 고도성장기에는 대부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 가는 초과수요 상태가 많았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저성장 시기에 진입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수요의 충분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저성장기에 접어든 2000년 이후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산업단지의 경우 지정이 해제되거나 수요부족으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음
  - 2000~2019년 기간 중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단지가 86곳에 이르며, 산업단지 지정 이후에 계획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요부족으로 분양이 안 되거나 장기간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는 등의 이유(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2019, 100-106 참조)로 산업단지 지정이 취소되었으며 이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함
  - 산업단지 미분양은 주로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였으며, 2015년 미분양 면적이 크게 증가하다가 최근 다소 줄어들었음

**그림 12** 8개 도지역 일반산업단지 미분양면적

(단위: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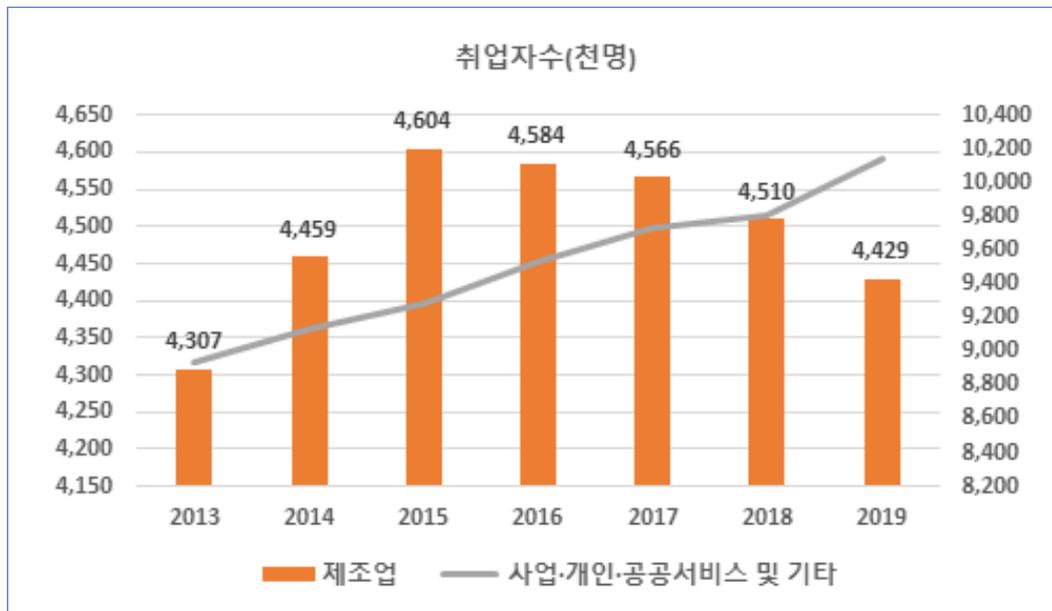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https://www.industryland.or.kr/>)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제조업은 일자리 수가 줄고 있어 산업단지 개발형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경제성장과 함께 제조업부문의 고부가가치화 및 서비스업 비중의 확대 등 산업구조 변화에 의해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비중뿐만 아니라 일자리 총수도 줄어들고 있음
- 제조업 취업자수는 2015년 460만 4천 명을 기록한 후에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9년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2만 9천 명임
-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13 제조업 및 서비스업 취업자수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산업별 취업자([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E06S&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E06S&conn_path=I3), 2020년 4월 24일 검색)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도 수요부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취소된 사례를 볼 때 외부 의존적인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은 재고될 필요가 있음

- 지방중소도시에는 땅값이 싼 것 외에는 인프라 접근성, 관련기업과의 밀접성, 상품시장의 접근성, 인력공급의 용이성, 정주여건 등의 기업입지 여건이 불리하므로 대형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에는 제약이 따름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수요와 지역공급을 기반으로 한 지역개발사업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

### 3) 지역일자리 창출 관련 지역수요(청양군 및 논산시 사례)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청양군의 설문조사 결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 연령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1순위로 선택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의 경우에는 15~19세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두 번째로 선정되었음
  - 군지역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60대 이상의 경우에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농촌지역일수록 농업부문에 노인고용률이 높은 이유도 있고, 기존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음

**표 4** 청양군 일자리창출 관련 설문조사 결과

1순위 기준	전체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6.4	39.5	31.9	30.5	31.4	45.3	35.7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0.7	12.3	25.3	31.6	24.8	20.1	17.7
공공근로 사업	11.2	3.8	7.5	10.1	9.9	7.8	14.9
마을기업 육성사업	10.8	4.0	10.4	12.1	14.1	12.1	10.0
취업박람회	10.4	24.8	19.4	6.3	10.7	8.6	8.1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6.3	9.7	5.4	8.3	4.9	4.6	6.7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4.2	5.9	-	1.0	4.1	1.4	6.8
무응답	0.1	-	-	-	-	-	0.1

자료: 국가통계포털. 청양군 일자리 창출 활성화.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3&tblId=DT\\_213009\\_17M06&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3&tblId=DT_213009_17M06&conn_path=I3) (2020년 4월 24일 검색); 충청남도. 충청남도 사회조사에서 재인용.

- 지역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논산시의 설문조사 결과 군지역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대체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청년창업지원사업’의 정책우선 순위가 높음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 15~19세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정책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창업지원사업의 경우 15~19세, 20~40대에서 정책우선순위가 각각 1, 2순위로 나타났고,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의 경우 50대에서 상대적으로 정책우선 순위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음

**표 5** 논산시 일자리창출 관련 설문조사 결과

1순위 기준	전체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3.9	8.9	19.8	23.2	29.0	31.9	21.5
청년창업지원사업	20.3	42.1	29.9	25.4	24.2	17.2	11.3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8.4	16.0	18.1	18.9	21.1	23.1	14.8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15.8	2.5	7.3	6.7	6.4	11.2	31.0
일자리인프라 구축 (취업행사, 고용복지센터 운영)	12.1	26.1	23.7	16.8	14.0	10.0	4.4
공공근로 사업	8.0	4.4	1.1	6.8	4.3	6.2	14.2
무응답	1.5	-	-	2.3	1.0	0.5	2.8

자료: 국가통계포털. 논산시 일자리창출 활성화.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3&tblId=DT\\_213009\\_17G03 &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3&tblId=DT_213009_17G03 &conn_path=I3) (2020년 4월 24일 검색); 충청남도. 충청남도 사회조사에서 재인용.

-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군지역과 시지역 중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같이 지역기반 공동체 형태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논산시와 같이 도시지역의 경우 60대 이상 응답자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정책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도시지역은 농업부문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고령인구의 고용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논산시의 경우와 같이 상대적으로 고령화율이 낮고 취업기회가 많은 도시지역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는 창업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수요가 많음

  - 다만, 도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중소도시와의 경우 고령화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경제적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군지역과 같이 지역기반의 공동체 형태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지방중소도시나 군지역의 경우 젊은 연령층과 고령인구가 함께할 수 있는 지역기반 공동체 형태의 일자리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05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와 과제

### 1) 사회적경제의 대두 배경

- 사회적경제는 유럽연합(EU)에서 1990년대부터 세계화에 따른 압력,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출산율의 저하와 노인인구의 증가 이른바 고령화 현상 등의 대안으로 주목받게 됨(정태인, 이수연 2014, 185)
  - 이 시기는 신자유주의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며 여성운동, 환경운동, 문화운동, 공동체운동 등 다양한 시민단체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침
  - 2009년 유럽연합(EU) 의회가 채택한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가 대표적 사례임
- 유럽연합(EU) 의회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에는 사회적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sup>13)</sup>
  - 사회적경제는 수익성과 연대의 결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경제·지역적 결합의 강화, 사회자본의 창출, 활발한 시민의 권리 증진, 그리고 연대와 사람을 우선하는 민주적 가치를 지닌 경제 형태를 통하여 유럽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울러 사회적경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회, 환경, 그리고 기술혁신을 지원함
  - 사회적경제는 상식적인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 사회적경제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전제조건으로 적절한 정치·제도·경영측면에서의 지원과 사회적경제 관련 기구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함
  - 사회적경제 기업은 다른 기업과 동일한 경쟁의 룰을 적용받아서 안 되며, 다른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함

13)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9 february 2009 on social economy)’ 48개 항목 중 총론(general remarks) 부분 5개 항목을 번역하였음.

- 사회적경제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시스템하에서는 주주나 규제당국의 감시를 벗어난 일부 민간기업의 금융시장에서의 투기활동을 감소시킬 것임
- 사회적경제는 목적, 경제행위, 조직구조, 규제의 강도 등 4가지 측면에서 구분한 양극단의 중간형태라고 할 수 있음(William A. Ninacs 2002, 6-7 참조)
  - 첫째, 목적이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가, 둘째, 조직형태가 공식적인가 비공식적인가, 셋째, 경제활동이 상업적 혹은 비시장적인가, 넷째, 규제의 강도가 강한 조직인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인가 등의 기준이 있음
  - 사회적경제는 각 기준의 중간 형태로서 신용조합, 공제조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선단체, 비영리단체 등이 있음
- 사회적경제를 시장경제 외에도 공공경제 생태경제와 비교한 정태인, 이수연(2014)의 사례를 통해서 본 사회적경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인간 본성에 대해 시장경제는 ‘이기성’, 공공경제는 ‘공공성’, 생태경제는 ‘공생의 본능’, 사회적경제는 ‘상호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
  - 다음으로 시장경제의 상호 작용 기제가 ‘경쟁’이라면 공공경제는 ‘합의’, 사회적경제는 ‘신뢰와 협동’, 생태경제는 ‘공존’에 기반을 두고 있음
  -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의 목표가 ‘효율성’, 공공경제는 ‘평등’, 사회적경제는 ‘연대’, 생태경제는 ‘지속가능성’에 두고 있음
  - 현실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와 공공경제와 분리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음(정태인, 이수연 2014, 189-190 참조)

**표 6** 시장경제, 공공경제, 사회적경제, 생태경제와의 비교

구분	인간 본성	상호 작용의 기제	목표
시장경제	이기성 homo economicus	경쟁(등가교환)	(파레토)효율성
공공경제(국가)	공공성 homo publicus	합의(민주주의)	평등
사회적경제(공동체)	상호성 homo reciprocans	신뢰와 협동(공정성)	연대
생태경제 <sup>주)</sup>	공생의 본능 homo symbios	공존 세대 간 정의와 국가 간 정의	지속가능성

주: 정태인, 이수연(2014)에 의하면 생태경제학은 기존의 환경경제학과 구분하면서, 환경경제학은 생태문제를 외부성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통 경제학적 방법에 따라 해결하고자 하며, 생태경제는 “경제를 에너지와 물질이 흐르는 생태계의 하위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생태계의 법칙과 세대 간의 정의라는 원칙에 따라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추구한다”라고 정의함.

자료: 정태인, 이수연 2014, 185 참조.

## 2)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현황

-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특징으로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시장경제와 유사하나 활동목표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관계부처 합동 2017, 3)

- (자율·민주) 효율경영보다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1인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원칙으로 조직운영
- (사회통합) 상업적 목표보다는 구성원 간 이익공유·취약계층 일자리창출·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
- (연대·협력) 정부 또는 시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계층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 (경쟁·보완) 시장조직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령화,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법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
  -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음 (2007)
    - 동법에 따라 5년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는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외에도 「협동조합 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사회적경제의 조직 유형에 따라 다양한 관련법이 있음
- 또한 각 부처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최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2007년), 협동조합(기획재정부 2012년), 자활기업(보건복지부 2012년), 마을기업(행정안전부 2010년) 등 부처별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이름과 근거법 등은 상이함

**표 7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현황**

구분 (시행)	사회적기업 (2007년)	협동조합* (2012년)	자활기업 (2012년)	마을기업 (2010년)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목적	취약계층 고용 창출, 서비스 제공	조합원 권익 향상, 지역 사회 공헌	수급권자 등의 자활 지원	지역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근거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행안부 지침
개수(2016년 말)	1,713개	10,640개	1,149개	1,446개

주: \*농협, 수협, 신협, 생협 등 특별법에 의한 8개 개별 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기업 범주에 포함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8, 1.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부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자체적인 판단임

- “정부주도하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양적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EU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미흡”(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17, 2)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은 1.4%<sup>14)</sup>로 EU 6.5%의 22% 수준에 불과<sup>15)</sup>(2015년 기준)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17, 2)
- 특히 벨기에는 사회적기업이 민간고용의 17%에 이르고, 프랑스의 경우 2014년 GDP의 10%, 240만 일자리를 차지함(OECD 2017, 3)

■ 우리나라보다 앞서 출발한 유럽 등 해외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보면 기업규모, 경제적 효과 등에 있어서 차이가 큼

- 2015년 유럽 등 9개국 1,030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SEFORIS 2016)<sup>16)</sup>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 2014년 생산 60.6억 유로, 고용 50만 명, 수혜자 8.7억 명, 550만 명에 일자리를 제공

14) 「사회적경제기본법」상 총 고용인원(2,593만 6천 명)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수(36만 8,268명, 복수지위에 따른 중복 포함)

15) EU는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에 협동조합, 협회, 공제회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사회적경제기본법상 조직)보다 범위가 포괄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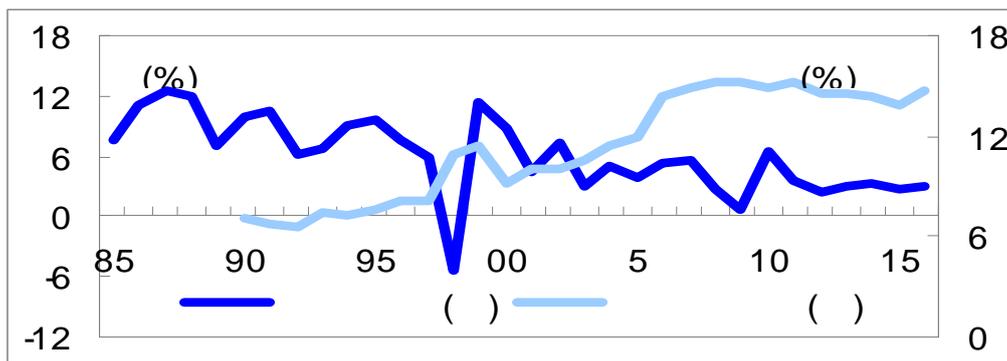
16) SEFORIS 프로젝트(EU 집행위원회의 기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제연구 사업)에서 2015년 헝가리, 루마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스웨덴, 영국, 러시아, 중국 등 9개 나라의 1,030개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사한 결과임 (<http://www.seforis.eu/news/2016/10/20/first-seforis-cross-country-results-available>, 2020년 12월 15일 검색).

### 3)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 ■ 유럽의 사회적경제가 대두한 여건과 지역경제가 직면한 여건이 유사함

- 유럽의 경우 사회적경제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출발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득의 양극화, 고령화, 저성장의 고착화 문제는 200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0, 4)
  - 2000~2016년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
  - 2017년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10분위 배율 기준 불평등도 3위
- 특히 지역경제는 고령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득의 양극화와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쇠퇴가 더욱 심각한 문제임

그림 14 경제성장-소득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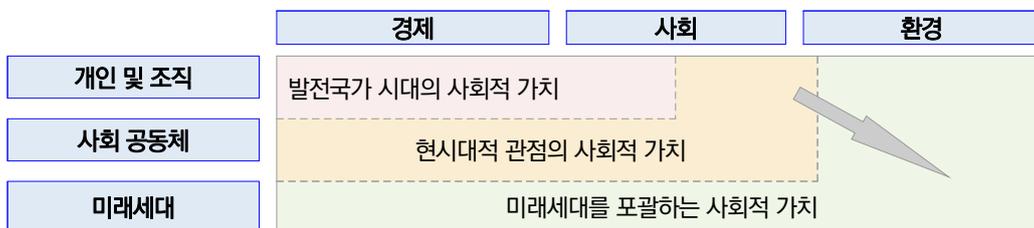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0, 4.

#### ■ 고령인구 비중이 높고 젊은 층의 인구유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은 과거와 같이 외부 의존적이고,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즉 경쟁에 기반하는 경제성장 전략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음

-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조업의 고용자는 줄어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산업입지 여건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제품시장 측면에서도 인구감소 및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방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은 수요기반이 약함
-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전략은 더욱 더 어려운 여건이 될 수밖에 없음
- 최근 지역경제 성장전략이 외부 의존적 성장전략에서 지역 내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강조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변화된 환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저성장 인구감소시대의 성숙한 경제단계에서는 지역발전의 목표도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률의 고도화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두어야 하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임
  - UN은 새로운 국제 공동목표로서 포용성·보편성 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2016~2030년)’를 수립한 바가 있음
  - EU에서는 사회적책임조달 지침(2010) 및 비재무정보 공시(2014), 영국에서는 사회적가치법 제정(2012)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법제화 및 국제 규범화 추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가치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3대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사회적가치 기본법(안)에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13개 대표적 세부가치에는<sup>17)</sup> 지역경제, 지역사회, 일자리, CSR, 공동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일자리 창출이 사회적경제와의 밀접한 관계<sup>18)</sup>를 알 수 있음
- 지역경제가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이 있는 경우에도 사회적경제 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회복력에 도움이 된 사례도 있음
  -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의 경우 2008년 외환위기 이후 2014년 기간 중 사회적경제 기업의 고용은 각각 20%, 12%, 0.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민간기업의 고용은 감소하였음 (OECD 2017, 3 참조)
- 사회적 가치의 활성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임
  - 정부의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전략에서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개인의 경제적 후생에서 시작하여 삶의 질, 공동체와 미래세대까지 고려(sustainability)하는 ‘균형감 있고 포괄적인 발전’ 개념으로 정의(관계부처 합동 2020, 1 참조)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0, 1.

17)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17.10. 박광온 의원 발의안, 기재위 계류)의 13개 대표적 가치는 인권, 안전, 복지, 노동, 사회통합, 상생, 일자리, 지역사회, 지역경제, CSR, 환경, 참여, 공동체 등임.  
 18) 지역발전에 있어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Borzaga, Carlo and Ermanno Tortia 2009, 211-2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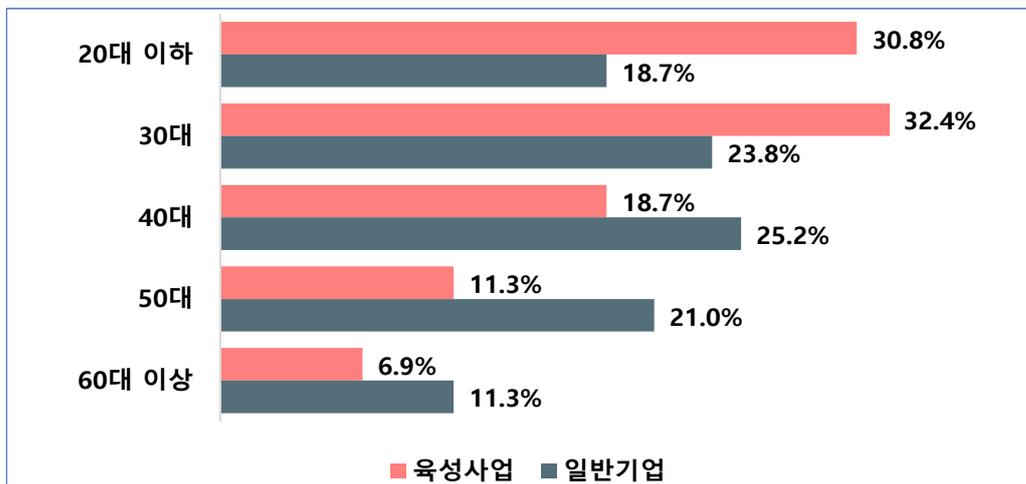
#### 4) 지역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의 과제

##### (1) 청년과 노인이 공생하는 포용적 일자리 창출

■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정책의 일자리 창출은 여성 및 정규직 고용비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부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있음

- 육성사업 창업기업은 30대 이하 및 30대 고용비율이 63.2%로 가장 많고, 일반 창업기업의 동일연령대 비율 42.5%에 비해 20.7%p 높고, 60대 이상 고령고용은 6.9%로 일반창업기업의 11.3%보다 4.2%p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5** 연령별 고용현황 비교



자료: 고용노동부 2019, 2.

-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일자리 정책은 청년일자리와 함께 고령인구에 대한 일자리도 확대하는 상생의 포용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특히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전략으로 적합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8)<sup>19)</sup>

**표 8** 육성사업 창업기업과 일반 창업기업 고용현황 비교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근로 형태별	
	남성	여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육성사업	42.0	58.0	30.8	32.4	18.7	11.3	6.9	88.5	11.5
일반기업	55.9	44.1	18.7	23.8	25.2	21.0	11.3	67.1	32.9

자료: 고용노동부 2019, 1.

19) 주식회사 알비핀(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은 할머니가 만드는 수공예품을 판매해 상주지역 20명 할머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청년에 네트워킹 공간 및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 (2) 규모의 영세성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협력과 공생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유럽국가들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sup>20)</sup>
  -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혁신평가, 공기업 경영평가, 공공조달 등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
    - 정부혁신 핵심원칙으로 선정(2018.3), 정부혁신평가(2018.5) · 지자체 합동평가(2018.3) · 공공기관 평가(2017.12) 등에 지표 반영, 사회적경제기업 입찰가점 도입(2017.12) 등
  - 민간부문의 경우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SK), 사회적 금융 조성(KB, 한국성장금융), 시민단체의 착한 소비 운동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 전개
- 더욱이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기업은 고용인원이 6~10명 수준의 소규모 영세기업 형태가 대부분임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4.14.)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사회적경제기업(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자활기업) 수는 2만 2천여 개로 2018년(1만 9,397개) 대비 13.7% 증가했고, 13만여 명을 고용....”하므로 기업당 고용 수는 약 5.9명임
  -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2018년 사회적경제 기업수는 2만 4,890개,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자 수는 25만 5,540명이므로(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0, 51 참조) 사회적경제 기업당 취업자 수는 10.3명 수준임
- 사회적경제 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접지역 혹은 타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과 연대하거나 중심지역의 중견기업과 연계하는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
  - 소규모 기업은 대규모 기업에 비하여 생산 및 판매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유사한 환경의 기업과 연대하거나 대기업과 연계하지 않으면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특히 인구과소화 지역이 증가하고, 고령화 수준이 높은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는 인접지역과 연대하거나 중심지역과 연계하지 않는 지역발전전략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측면에서 지역 간 네트워킹의 중요성은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짐

20) 이하의 공공 및 민간부문의 활동사례는 관계부처 합동 2020, 4 참조.

### (3) 사회적기업의 지역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 주체로서의 역할 증대

- 지역개발사업은 일부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형태도 있지만 대부분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운영단계에 일부 참여하는 방식이 주를 이룸
  - 근린생활형 도시재생사업은 민간부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소규모의 사업들이 민간기업 혹은 사회적경제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소규모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마을 공동체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음
  - 그렇지만 규모 있는 지역개발사업은 대부분 지자체 주도이거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기업 혹은 일부 민간기업의 협업형태로 SOC 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사업, 관련 시설물 건설 사업 등임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지역개발사업보다는 지역경제 생태계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업 발굴이 보다 중요함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사업이나 대형 기업의 유치보다는 당장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선순환의 지역경제 생태계에 보탬이 되는 지역사업의 발굴이 중요
  - 즉,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나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역개발을 주도하거나 적어도 지역개발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됨
- 그리고 규모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외부 의존성을 줄이고, 지역발전 주체로서 사회적경제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지역발전의 주체가 관주도가 아닌 사회적경제 기업이 함께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은 계약의 당사자가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되어 있으나 협약의 주체를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기업이 취약한 원인인 지역금융제도 도입, 지역인력 양성, 시장 개척 및 지원 등 선결되거나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중장기적으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함

#### (4)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일자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외부 의존적인 대형 기업의 유치나 소수의 대규모 기업에 의존하는 지역경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일자리를 담보하지 못하고 경제위기 시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더디게 함
  - 대형 기업의 유치로 인한 일자리는 지역주민의 고용효과가 제한적이며, 해당기업 종사자 유입에 인한 간접적인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그침
  - 특히, 대규모 기업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철수 시 해당업종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관련기업의 일자리도 함께 사라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함
  - 또한 일부 대형 기업의 비중이 큰 지역경제일수록 위기 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경제 회복력도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함
- 지역 내 영세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량을 키워 시장에서는 공급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나 프로그램 등의 국책사업, 지자체 지역개발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면 소득의 지역 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재투자되는 선순환 지역경제 생태계 형성에 기여함
  - 국책사업, 지자체 지역개발 사업은 과거와 같이 관주도의 SOC, 산업단지과 같은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도의 중소도시나 농촌지역 등 인구과소지역에 필요한 지역개발 사업 등을 개발
  - 이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이나 중심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연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오랜 기간 성공적인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 간 연대 및 협력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개발사업에서 지역 간 협력사업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내용을 지역 간에 물리적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음
  - 이는 지역개발사업에서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어 협력하는 경우 부담과 성과를 분배하는 문제에 있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정치적인 동기 등으로 부담과 성과의 분배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임
  - 따라서 지역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같은 목적과 필요에 의해 협력하거나 유대하는 것이 관 주도 협력사례의 실패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06 향후 정책과제

### ■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할 증대 방안 마련

- 사회적경제 선도국가에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범위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정책에서 공공부문 역할의 적정성 및 과제를 도출
- 시장기능에 맡기면 공급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나 프로그램 등의 국책사업이나 지자체 지역개발 사업 유형의 선진사례 조사 및 발굴
- 공공서비스나 프로그램 등의 국책사업이나 지자체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할 증대 방안

### ■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역 간 연대 및 협력 모델의 제시 필요

- 지역개발사업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이 주체가 되어 타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이나 성공사례 등을 조사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역 간 연대 및 협력 모델 제시
- 지역정책에서 공간의 연계성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과제이므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역 간 연대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음

### ■ 고령화 시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청년일자리와 고령인구 일자리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도입 검토

- 고령인구의 근로시간 제약과 고령인구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의 활용을 위한 킥 이코노미(Gig Economy) 방식(잡코리아 2019b)<sup>21)</sup>의 고용형태 활용 방안
-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노동투입이나 노동시간 선택의 자율성과 노동장소의 제약이 없는 노동형태는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노령인구에게도 필요한 근무형태이므로 노인인구의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의 가능성을 검토

21)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동자가 때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제 활동 방식. [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5726&schCtgr=120003&Page=1](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5726&schCtgr=120003&Page=1) (2020년 12월 15일 검색).

■ 일하는 장소의 유연성을 통해 지역 간의 연계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지역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

- 이미 코로나 19 방역체계의 하나로 재택근무가 보다 확대되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하는 장소의 유연성이 보편화될 수도 있음
- 즉, 일하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리모트 워크로 인접지역뿐만 아니라 중심지역과의 연계성도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지역일자리의 확대 기회가 될 수 있음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9. 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12월 11일, 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8.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2월 8일, 보도자료.
- \_\_\_\_\_. 2020.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 전략. 1월 15일,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2019 전국산업단지 통계.
- \_\_\_\_\_. <https://www.industryland.or.kr/>
- 기획재정부. 2019a.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 총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9월 18일, 보도자료.
- \_\_\_\_\_. 2019b. NEWS1 [22년 정년연장 의무화 추진...65세까지 일하는 사회 만든다] 제하 기사 등 관련. 9월 18일, 보도자료.
- 남상호. 2017. 정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시내. 2019. 고령화와 노년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통계플러스 2019 가을호. 대전: 통계청.
- 안흥기 외. 2017.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세종: 국토연구원.
- 이근태, 이지선. 2017.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시장과 노동시장. 서울: LG경제연구원.
- 이상호. 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고용동향 브리프 07. 음성: 한국고용정보원.
-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0월 18일, 보도자료.
- \_\_\_\_\_. 2020. 사람중심 경제를 실현할 하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3월 9일, 보도자료.
- 잡코리아. 2019a. [이슈&논술] 정년연장은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칠까?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3916539&memberNo=9028903&vType=VERTICAL> (2020년 12월 15일 검색).
- \_\_\_\_\_. 2019b. [인물·용어] 새로운 고용형태 '긱 이코노미'의 등장! [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5726&schCtgr=120003&Page=1](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5726&schCtgr=120003&Page=1) (2020년 12월 15일 검색).
- 정태인, 이수연. 2014.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도서출판 레디앙.
- 통계청. 2019a. 2019 고령자통계. 9월 27일, 보도자료.
- \_\_\_\_\_. 2019b. 시도별 장래가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 \_\_\_\_\_. 2020a. 소득분배지표 이용자 설명자료.
- \_\_\_\_\_. 2020b.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2월 26일, 보도자료.
- 국가통계포털. GRDP(2010년 기준).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20년 4월 16일 검색).
- \_\_\_\_\_. 고용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03\\_A01S&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03_A01S&conn_path=I3) (2020년 4월 24일 검색).
- \_\_\_\_\_. 논산시 일자리창출 활성화.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3&tblId=DT\\_213009\\_17G0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3&tblId=DT_213009_17G03)

&conn\_path=l3 (2020년 4월 24일 검색).

\_\_\_\_\_. 산업별취업자.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E06S&conn\\_path=l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E06S&conn_path=l3) (2020년 4월 24일 검색).

\_\_\_\_\_. 세후 및 양도 후 민곤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BS06&conn\\_path=l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BS06&conn_path=l3) (2020년 4월 21일 검색).

\_\_\_\_\_. 소득분배지표(연령계층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6&conn\\_path=l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6&conn_path=l3) (2020년 4월 26일 검색).

\_\_\_\_\_. 실업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ES3A01S&conn\\_path=l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ES3A01S&conn_path=l3) (2020년 4월 27일 검색).

\_\_\_\_\_. 청양군 일자리창출 활성화.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3&tblId=DT\\_213009\\_17M06&conn\\_path=l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3&tblId=DT_213009_17M06&conn_path=l3) (2020년 4월 24일 검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2019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차보고서. 성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 사회적경제 지원정책과 지원사업, 한권에 담아-행안부, 지역현장을 위한 안내서 [사회적경제 정책 자료집] 발간. 4월 14일, 보도자료.

Borzaga, Carlo and Ermanno Tortia. 2009. Social Enterprises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in Antonella Noya (ed.), *The Changing Boundaries of Social Enterprises*. OECD Publishing: Paris.

European Parliament. 2009. Social Economy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9 February 2009 on Social Economy (2008/2250(INI)).

40 OECD. OECD Data-Real GDP long-term forecast. <https://data.oecd.org/gdp/real-gdp-long-term-forecast.htm> (2020년 6월 1일 검색).

\_\_\_\_\_. 2017. boosting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good practice compendium.

SEFORIS. 2016. First SEFORIS cross-country Results available. <http://www.seforis.eu/news/2016/10/20/first-seforis-cross-country-results-available>.

Ninacs, W. A., and Toye, M. 2002. SRDC Working Paper Series 02-02.

국토연구원 Working Paper는 다양한 국토 현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고 활용도 높은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작성한 짧은 연구물입니다. 투고된 원고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발간되며, 외부 연구자의 투고도 가능합니다. 공유하고 싶은 새로운 이론이나 연구방법론, 국토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 국내외 사례 연구나 비교연구, 창의적 제안 등 국토분야 이론과 정책에 도움이 될 어떠한 연구도 환영합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044-960-0582, jhkim@krihs.re.kr)으로 연락주십시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WP 20-10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의 사회적경제와 과제

**연구진** 안흥기  
**발행일** 2020년 12월 17일  
**발행인** 강현수  
**발행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 2020, 국토연구원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